

통합파 ‘통추위’ 구성 착수…반대파 “기준 미달 安 퇴진을”

바른정당과 통합 찬성 통과 ... 국민의당 내홍 절정

“최소 투표율 ‘3분의 1’ 못미쳐” 반대파 거센 저항

국민의당지킴이본부 출범 ... 지역 정치권도 반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전당원 투표 결과가 지난해 12월31일 발표되자 통합 반대파인 국민의당 의원 18명은 이번 투표를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규정하고 안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지역정치권에서도 반발이 확산 기세여서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반대파 국회의원들은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에 명시된 최소 투표율 ‘3분의 1’ 기준에 못 미친 이번 투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반대이자,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안 대표에 대해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보수야합 추진을 저지하고 안 대표를 퇴출시켜 국민의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당지킴이운동본부’를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25.7%에 그치자 즉시 시장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며 “전당원투표에

실패한 안 대표는 이를 타산지적으로 삼고, 합당 추진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김경진·김광수·김종화·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열·윤영일·이상돈·이용주·장정숙·장병완·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가나다순) 등 18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다.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도 안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투표결과 발표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지방의원 간담회 등을 열어 탈당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광주시의회 소속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민중 의원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예상대로 투표율과 찬반 결과가 나왔고,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3분의 1도 안 되는 투표율로 어떻게 통합과 당 대표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이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당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기 전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소속 이 지역 지방의원 대부분의 의견”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년 2월 전까지 하루라도 빨리 당 내분을 수습해야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통합반대에 대한 의원들과 지역당원의 뜻은 이미 확인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른 시일 안에 논의하겠다”며 “2일 시장 단배식이 끝난 직후 의원 간담회를 하고 후속 행동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과 시·군의원들도 최대한 이

른 시일 안에 모임을 하고 투표결과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향후 정상적인 전당대회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내 갈등이 조속히 봉합되지 못하면 집단탈당도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소속 한 전남도의원은 “투표

결과를 합당 근거로 삼겠다는 것은, 투표를 거부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단탈당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다시피 해 언제든 결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 당 만들어 국민의당·바른정당 흡수 ‘신설 합당’ 유력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찬성 70% 넘어 ... 통합논의 착수

전당대회 반대파 물리적 저지 차단 ‘전자투표’ 도입 논의

국민의당 전(全)당원투표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70%를 넘김에 따라 합당을 향한 양당의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따르면 양당은 현재 교섭장구인 ‘2+2 채널’을 확대,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에 공식 착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양당은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당 방식으로는 새 당을 만든 뒤 이 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사실상 흡수토록 하는 ‘신설 합당’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의당은 조만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해 전대 시행세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준위를 생략한 채 당무위원회 개최만으로 전대로 직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 대표 측에서는 대표 당원 참

여율을 끌어올리고 안전 의결에 힘을 쓰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대에서 통합 반대파의 물리적 저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합 반대 진영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장이 이번 전당원투표가 1/3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의장이 전자투표 개최 선언을 하고 투표 종료 선언을 하고 개표 선언을 해야 하는데 의장 없이는 방법이 없다”며 “전당대회 의장을 바꾸려 해도 전당대회를 열어서 바꿔야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합당파가 생각하는 전당대회는 열릴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오는 28일을 전후해 전대를 열어 통합 절차를 마루

리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합 시점과 관련해 “(합당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 1월에 시작하면 2월에 끝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합당 사안은 전당대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만 한다. 국민의당과 달리 바른정당의 경우 의원총회 및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최고위원회 등 선행 단계에서 결립돌이 없는 만큼 전대로 무사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 즉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이 있을 경우 바른정당 내 통합 절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우리 측은 별다른 문제없이 합당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일부 이탈도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 정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2위가 된다는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에서 세번째) 원내대표가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여야, 승리 다짐

새해 맞아 당 지도부 단배식·동교동 방문·현충원 참배

여야가 올 지방선거의 해를 맞아 승리의 구체적 목표를 정한 가운데 1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각 당 지도부는 단배식과 동교동 방문, 현충원 참배를 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당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성적표에 따라 희비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동상이몽의 처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대전·충남·충북·세종·광주·전남·전북·강원 등 9곳,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인천·경기·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제주 등 8곳에서 승리했다. 이후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한국당을 탈당해 지금은 바른정당 소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최소 12개 안팎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지지를 등을 감안하면 대승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다음 총선에 반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승리’가 중요하다. 최대 12개 정도가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 이겼던 9곳에다 부산·경남·울산 중 최대 2곳, 경기·인천 중에서도 1곳 이상 승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야 한다”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뒷받침을 위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당력을 집중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초심으로 똘똘 뭉치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단배식 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찾아 새해 인사를 한 뒤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당의 중흥과 집권여당의 발전을 기원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자당(自黨) 소속 광역단체장 6곳 사수(死守)가 목표다. 지난 9월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이 가진 6개 지역에서 못 이기면 “당대표에서 내려오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지방선거가 잘못되면 똑같이 책임지는 형태의 책임공전을 하겠다”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다음 총선에서 책임을 지고, 또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가 잘못되면 6월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 최대 5곳 승리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통합이 되고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면 서울·경기 중 1곳, 충청권에서도 1곳, 호남 2곳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단배식에 참석, “올해는 우리 당의 운명을 좌우할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소중하다”며 “무술년은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해라고 한다. 우리 당에 큰 복을 가져올 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요양병원
변경 가능

호텔

- 구례 산동 온천지구, 4층, 대형 모델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올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바른정당 “통추위·창준위 가동 시키자” 제안

11명 통합열차 탑승할지

남경필·원희룡 행보 관심

국민의당의 통합 상대 정당인 바른정당이 지난 31일 발표된 국민의당 전(全)당원 투표 결과를 환영하면서 즉각 통합 논의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국민의당 당원투표 결과 안 대표께서 재신임을 받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찬성하는 당원들의 뜻이 확인됐다”며 “환영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통합추진이 불려온 국민의당 내홍을 지켜보며 ‘관망’ 기조를 보여왔으나,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결과 발표를 계기로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원 2명씩 참여해 온 기존의 ‘2+2 협의체’를 공식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

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정치적인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그동안 물밑에서 가동하던 ‘2+2 협의체’를 공식적인 채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 협의체’를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로 격상하거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과의 정책조율 등 양당간 교섭창구 역할을 해온 하태경 최고위원은 “2+2 협의체를 확장한 통추위를 1월 초에 구성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실무창구가 아닌 통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통합수임 기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추위나 창준위를 가동시켜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국민의당 내홍이 양당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유승민 대표는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결과발표 이후 환영의사를 밝힌 입장문

에서 “그동안 통합 찬성과 반대 측이 대립해온 국민의당이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통합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바른정당 11명 의원 전체가 통합 열차에서 이탈하지 않고 전원 통합정당에 탑승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모두 신설 통합정당으로 적을 옮겨갈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두고 거친 파열음은 터져나오지 않았으나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당내 주요 인사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등 이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바른정당 내 탈당 규모가 예상 외로 클 경우 통합 논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